

auri brief.

건축공간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 요약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다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도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
-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등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이 다수 포함
-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2년차에 접어든 한국판 그린뉴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양국의 공통분모를 찾아 건축·도시 부문의 협력사업을 확대·고도화할 필요

● 시사점

- 한미 양국은 공통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 정책수단으로 그린뉴딜에 대규모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건축·도시 부문에 대대적인 정책사업을 추진
- 한국판 그린뉴딜이 단기적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따른 건축·도시의 물리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그린뉴딜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 재검토 필요
- 바이든 정부의 청정·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가 전망되므로 신재생에너지 건축설비,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국내 그린뉴딜 관련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확대가 필요
- 탄소세 도입, 녹색기후기금 확대 등 바이든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한 건축·도시 부문의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홍보·교류 채널을 구축해야 함

| 주제어 | 기후위기, 그린뉴딜, 바이든,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① 그린뉴딜 정책 배경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대안으로서 그린뉴딜 부상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따라 사회·경제활동 위축
 -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과 긴 잠복기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은 봉쇄 조치, 이동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확산 방지 과정에서 사회·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
-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기부양책 추진 기조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도 저탄소경제 전환과 기후위기에 지속가능한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

해외 주요국의 그린뉴딜 추진 현황

구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뉴딜*	미국 바이든 공약**	EU 유럽 그린딜**
발표 시점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2020년 7월 14일 대선 공약 발표	2019년 12월 11일 EU 집행위원회 발표
목표	2050년 탄소중립	2050년 탄소중립	2050년 기후중립
예산	2025년까지 73조 4,000억 원	4년간 2조 달러 (약 2,401조 원)	10년간 1조 유로 (약 1,377조 1,200억 원)
주요 내용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회복 신재생에너지 전환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첨단 인프라 구축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청정전력 생산역량 확충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개선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전환 건축물 에너지성능 규제 법제화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6-18을 참고하여 작성.

** 심성희 외. (2020).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 에너지경제연구원, 3-4을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5년까지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총사업비 73.4조 원의 그린뉴딜 추진전략 제시¹⁾
 -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사회 전환에 대한 국가발전전략의 중요성 증대
 - 핵심 정책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등 건축·도시 관련 정책 사업이 다수 포함
-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 공식화²⁾
 - 12월 7일에 개최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12월 30일 UN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³⁾

1)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5-18을 참고하여 작성.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2533>
(검색일: 2020.12.30.)

3) 기획재정부. (2020).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12월 7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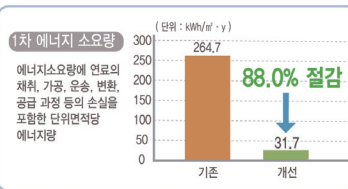
② 한국판 그린뉴딜의 건축·도시 정책 현황

● 그린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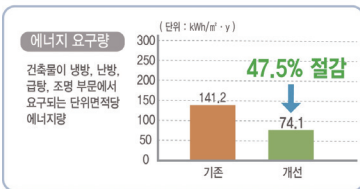
- (개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역할을 수행
 - (사업 규모)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2,170동, 공공임대주택 22.5만 호
 - (지원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공공임대주택⁴⁾
- (현황) 공모를 통해 2020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2020년 12월 17일에 첫 번째 사업 완료⁵⁾



건축물 1차 에너지 소요량 비교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비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완료사업 1호 철산어린이집

출처: 국토교통부.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첫 결실, 시립철산어린이집 준공. 12월 17일 보도자료, 3-4.

● 그린스마트 스쿨

- (개요) 노후된 학교를 리모델링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 전환하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융합사업⁶⁾
- (현황) 2020년 8월 18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⁷⁾하고, 9월 14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이 출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 구축 중⁸⁾
 - 2021년부터 785동(BTL 포함)의 노후 학교를 그린스마트 스쿨로 전환 추진⁹⁾

● 스마트 그린도시

- (개요) 기존 도시의 기후와 환경 문제를 진단해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 분야 정책 사업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녹색전환을 촉진¹⁰⁾

4) 국토교통부.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3을 참고하여 작성.

5) 국토교통부.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첫 결실, 시립철산어린이집 준공. 12월 17일 보도자료.

6) 교육부. (2020).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안), 7을 참고하여 작성.

7) 교육부. (2020). 교육부·시도교육청 '그린 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8월 18일 보도자료, 1.

8) 유은혜. (2020). 미래교육의 주춧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민일보. 10월 6일 기사.

9) 기획재정부. (2020). 2021년 예산안, 15.

10) 환경부. (2020).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6-10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 유형) 기후·환경 분야 정책사업 10개 유형을 제시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2~3개 정책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함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유형

분야	회복력			저배출		생태 복원			인간 중심	
기본 방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회복력 구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배출 지원 인프라 구축		자연환경의 보전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 생태계 복원			환경교육, 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유형	① 기후탄력	② 물순환	③ 물안전	④ 미래차	⑤ 자원순환	⑥ 생태복원	⑦ 생태휴식	⑧ 청정대기	⑨ 환경교육	⑩ 생활환경

출처 : 환경부. (2020).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10.

- (현황) 2020년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종합 선도형 5곳, 문제해결형 20곳을 선정하고 2021년부터 사업 착수 예정¹¹⁾
-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

● 도시숲

- (개요)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녹지 조성¹²⁾
- (사업 규모)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 숲 370개소, 공공 시설 옥상녹화 290개소 조성 등
- (현황) 2020년 7월 22일,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 추진계획 발표
- 11월 20일에는 ‘숲 미래와 재생에너지! 지역산림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산림뉴딜의 발전 방안을 모색¹³⁾

● 그린 모빌리티

- (개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¹⁴⁾
- (현황) 2020년 10월 30일, 그린 모빌리티 정책을 구체화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¹⁵⁾
- 건축·도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 향상, 기존 건축물 설치의무 신규 부과, 공공 유희부지를 활용한 수소차 충전소 발굴 등이 있음

11) 환경부. (2020). 전국 각지에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 선정. 12월 28일 보도자료, 1-2를 참고하여 작성.

12) 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84를 참고하여 작성.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숲 미래와 재생에너지! 지역산림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62>(검색일: 2020.12.30.)

14) 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98.

15) 환경부. (2020).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7-8를 참고하여 작성

③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건축·도시 정책 전망

● 바이든(Joe Biden)의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약

-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
 - 미국 민주당 소속의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을 주축으로 한 그린 뉴딜 결의안이 2019년 2월 미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
 - 당시 그린뉴딜 결의안에는 IPCC의 1.5℃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청정·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생산,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제안¹⁶⁾
 - 2020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이든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넷제로(Net-zero)를 위해 임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총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그린뉴딜 결의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바이든의 그린뉴딜 관련 공약에는 건물(Buildings), 주거(Housing), 교통(Transit) 등 건축·도시 부문에 대규모 정부재정 투자계획과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공약에서 제시한 건축·도시 부문의 정량적인 목표로는 건물 부문 2035년 탄소 배출경로의 50% 감축, 2035년 발전 부문 100% 무공해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 등이 있음
 - 대표적인 건축·도시 정책사업으로는 업무용 건축물, 창고, 공공건축물 등 4년간 400만 동의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및 주택 200만 호 단열성능 보강, 재난·재해로부터 습지 보존, 녹지 복원 등을 통한 물 관리 인프라 보호 등이 있음

바이든의 그린뉴딜 관련 건축·도시 정책 주요 공약

분야	공약사항
인프라 (Infrastructure)	-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e-스쿠터,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프라 확대 - 재난·재해로부터 습지 보존, 녹지 복원 등을 통한 물 관리 인프라 보호
교통 (Transit)	-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무공해 탄소 배출원 대중교통 제공 - 5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발전 (Power Sector)	- 2035년 무공해 탄소 배출원으로 발전 부문 100% 전환 - 건물 옥상 태양광, 커뮤니티 태양광 시스템 등 수백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
건물 (Building)	- 4년간 400만 동의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주택 200만 호 단열성능 보강(Weatherize) - 고효율 가전제품 업그레이드, 고성능 창호 설치 등에 보조금 지급 - 2030년까지 상업용 신축 건축물의 탄소배출 넷제로 법제화 - 국공립 학교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에너지효율 강화, 기후 탄력성 구축 - 고효율 에너지성능이 보장된 공공주택 150만 호 공급
혁신 (Innovation)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추가 공사비용 제로 연구 - 철강, 콘크리트 등 탄소중립 건축자재 연구

출처: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 2020.12.30.)

16) Ocasio-Cortez, A. et al. (2019).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es/109/BILLS-116hres109ih.pdf>(검색일: 2020.12.30.)

●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관련 공약 이행에 따른 미국의 향후 전망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¹⁷⁾
 - 바이든 정부는 공식 출범 후 임기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 다시 미국이 기후행동의 글로벌 리더로 복귀하겠다고 선언
 - 취임 후 100일 내에 미국의 가능한 외교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후 정상회담을 위한 주요 탄소 배출국 지도자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미국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기후·환경규제가 재개될 예정
 -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등 트럼프 정부가 폐지하거나 완화했던 125개 이상의 기후·환경규제 대부분을 되돌릴 것으로 예상¹⁸⁾
 - 미국과 교역하려는 국가를 대상으로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집약적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비용에 대한 과세나 할당량을 부과하는 외교통상 정책을 추진할 계획
 - 건축물과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등 기후·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풍력 등 청정·재생에너지 산업 수혜 및 시장 확대가 예측
 - 바이든은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청정·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에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약 2,200조) 투자를 공약
 - 발전 부문에서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미국 전역에 태양광지붕 800만 개, 태양광패널 5억 개, 풍력터빈 6만 개를 설치할 계획
 -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배터리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전망됨
-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관련 공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즉각 조치할 행정명령 공약과 입법 사항을 구분해 제시하며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음
 - 미 의회 상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 이상을 차지,¹⁹⁾ 바이든의 공약 이행에 힘이 실릴 예정

17) Dennis, B. (2020). The U.S. will soon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Then comes the hard part.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0/12/22/biden-paris-climate-accord/>(검색일: 2020.12.30.)

18) Eilperin, J. et al. (2020). Trump rolled back more than 125 environmental safeguards. Here's how. *The Washington Post*. October 30.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20/climate-environment/trump-climate-environment-protections/>(검색일: 2020.12.30.)

19) Irfan, U. (2021). How Joe Biden plans to use executive powers to fight climate change. *Vox*. January 6. <https://www.vox.com/21549521/climate-change-senate-election-joe-biden>(검색일: 2020.01.11.)

④ 한미 그린뉴딜 정책 요약 및 시사점

● 건축·도시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 그린뉴딜 정책 비교

- 한미 양국은 공통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에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건축·도시 부문에 대대적인 정책사업을 추진
 - 건축·도시 정책사업은 정부 정책의 메시지 전달과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매우 용이하여 양국 그린뉴딜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녹지공간 조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유사한 성격의 정책사업이 다수 있어 정책 교류 및 협력이 가능
- 한국판 그린뉴딜은 경기 회복을 위한 단기 정책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바이든의 그린뉴딜 공약은 미국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
 - 한국판 그린뉴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정책사업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고려는 다소 미흡
 - 건축·도시 정책사업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 모빌리티 등 건축, 도시, 교통, 조경 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주무부처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며 일부 중복되는 성격의 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진행 중

한미 그린뉴딜 건축·도시 정책 비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뉴딜*	미국 바이든 그린뉴딜 공약**
목표	2050년 탄소중립	2050년 넷제로(Net-zero)
중점사항	경기 회복을 위한 단기 정책사업 이행	미국 중장기 비전 제시
투자규모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	임기 4년간 총 2조 달러(약 2,200조 원)
유사 정책사업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고효율 공공주택 공급
	(그린스마트 스쿨)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원격 교육체계 구축	국립 학교 에너지효율 강화, 기후 탄력성 구축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 숲, 옥상녹화 등 녹지 조성	재난·재해로부터 습지 보존, 녹지 복원
	(그린 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확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프라 확대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8, 16-18을 참고하여 작성.

**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2020.12.30.)을 참고하여 작성.

● 바이든 정부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에 주는 시사점

-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수출·교 등 대외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
 -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판 그린뉴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함에 따라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보다 심화된 논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과 성과 등을 재검토할 필요

- 바이든 정부의 공격적인 그린뉴딜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2년차에 접어든 한국판 그린 뉴딜의 대응 방향과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미국에서 추진될 그린뉴딜과 한국판 그린뉴딜을 비교·검토, 한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공통 분모를 찾아 건축·도시 부문의 협력사업을 확대·고도화할 여건 마련

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대응 방향

- 건축·도시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관련 추진체계 정비
 - 미국이 파리협정에 가세함으로써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요구에 대비해 그간 한국판 그린뉴딜의 건축·도시 정책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잠재량을 산정하여 2030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정비할 필요
 - 한국판 그린뉴딜이 단기적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경제기반 전환에 따른 건축·도시의 물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린뉴딜 추진체계 및 법제도 재정비 필요
- 신재생에너지 건축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그린뉴딜 관련 기술 교류 확대
 - 바이든 정부에서 청정·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약한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요와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관련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추진
 - 미국의 자국산 제조업 장려 정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태양광설비, BIPV, 고성능창호, LED 조명, 열교차단재 등 기술집약적 건축자재 기업의 현지화 및 수출 지원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 정책 한미 외교 경제 부문 협력체계 구축
 - 탄소세 도입,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확대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한미 간 외교·경제 공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홍보·교류 채널 구축
 - 국제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세움터 등 한국의 선도적인 정책 운영 현황을 홍보하고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 방안 모색

지석환 연구원 (044-417-9695, shji@auri.re.kr)

남성우 부연구위원 (044-417-9693, swnam@auri.re.kr)

이은석 부연구위원 (044-417-9672, enlee@auri.re.kr)